

수혜대상도 파악않고 추진 '실적 제로'

■ 곁도는 전남도 정책

전남도 정책이 헛돌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가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는가 하면 거짓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추진** = 전남도는 지난해 4월 중·고교생을 포함한 미혼 출산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아동양육환경 조성과 빈곤 대물림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국비와 도비 등 5억2900만원을 들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4세 이하 여자 청소년이 미혼 상태에서 임신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비용(40만원) 지원사업을 비롯, 출산 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검정고시 학습비(연간 154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양육비(월 15만원)와 자립지원촉진수당(월 10만원), 의료비(월 2만4천

청소년 미혼모 친자확인 지원 등 '무용지물' 정책 수두룩 지난 2월 개설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안돼 구직자들 외면

원)지원, 자산형성계좌(5~20만원 이하)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친자확인 유전자 비용을 지원해준 전남지역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 검정고시 학습비도 순천 지역에서만 지원됐을 뿐 나머지 시·군은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특히 장흥·강진·해남·진도·신안군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의 모든 실적이 '제로'다. 통계상으로는 보면 이들 시·군의 한부모 가정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만 청소년 한부모 모임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사회적 편견에 고통받고 있는 실질적인 대상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쪽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

이 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도, 자치단

체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현황 파악은 커녕 수혜 대상 인일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히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19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남도 예상도 완전히 빗나가 고작 55가구(4093만원)가 지원받았을 뿐이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에 맞는 세부 집행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외면받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 전남도가 지난 2월부터 개설해 운영중인 일자리 종합센터(http://job.jeonnam.go.kr) 역시 구직·구인 정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지는 긍정적 취지에도 홍보 부족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층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면서 지역 기업들

이 인재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 내 기업들은 이 온라인망을 통해 861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지만 사이트에 일자리를 찾겠다고 올린 구직자들은 261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젊은층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홍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최근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곁돌고 있다"면서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모로코 군 수송기 추락... 78명 사망

지난 26일 모로코 남부 웨스틴사하리의 아가디르에서 출발한 C-130 허큘리스 군용수송기가 악천후 속에 비행하다 구엘린 부근 산 중턱에 추락, 군인과 승무원, 시민 등 78명이 숨졌다. 구조된 승무원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펴고 있는 구조대원들. /연합뉴스

'부실대학' 학교 폐쇄·법인해산 추진

구조개혁위, 하위 15% 재정지원 제한... 일반대·교대 통합 유도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 학교조 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웅)는 27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부실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날 오후 제3차 회의의를 열어 이런 방향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사립대의 경우 경영 부실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과 함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가 지속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폐쇄·해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간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폐합 요건을 조정하고 연금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사립대에 공통 적용하는 사항으로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태 평가 지표를 활용해 대학들을 평가해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하반기에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 특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국립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초등교사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해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과 '총장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지역경제 살리기 江으로 뭉쳤다

전남 영암 등 4대강 유역 24개 지자체 관광 리저 활성화 추진협의체 발족

4대강 유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 관광 관련 기관이 모여 강을 중심으로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모임을 결성했다. 영암군과 곡성군, 담양군, 전북 남원시를 비롯한 24개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관련 기관은 27일 '지역관광레저 활성화 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들은 강변에 문화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영산강 유역의 전남·북 4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충주시와 가평군, 화천군, 남양주시, 제천시, 단양군(이상 한강), 서천군, 영동군, 익산시, 논산

시, 대전 대덕구, 무주군(〃 금강), 안동시, 삼주시, 구미시, 고령군, 달성군, 창원군, 함안군, 함천군(〃 낙동강) 등 24개가 참여한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레일 관광개발부, 한국관광학회, 한국생태관광협회,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등 여행사와 관광

관련기관 10곳도 함께 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 사이에 협력체계가 구축돼 강 중심의 문화관광 사업으로 강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의원원 울릉도 방문 강행땀 입국 불허"

이대통령 지시... "신변안전 보장 할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계획에 대해 정부가 '원천봉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차적으로 해당 의원들이 입국을 자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펴되, 만일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이에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 기류를 감안해볼 때 해당 의원들이 실제 입국할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게 입국 금지의 명분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현재 국내적

인 분위기로 볼 때 해당 의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국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데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포항을 거쳐 울릉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이 과정에서 과거 시위군중을 의해 불상사가 일어

날 수 있다는게 치안당국의 판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전리는 내부에서 다양한 대응시나리오가 검토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직후 김홍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례보고에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韓-페루 FTA 내달 1일 발효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페루와의 FTA가 8월 1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자원부국인 페루와의 에너지·자원 협력강화와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루는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발효한 7번째 나라이며 중남미에서는 칠레와 더불어 두번째 FTA 상대국이다. /연합뉴스

南北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 촉구

'남북 화해 협력' 성명

'남북화해와 협력 활성화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대표 문상필)은 27일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와 구의원 등 34명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평화협정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해소하고 통

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며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진행,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시 지방의원에서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을 맞아 시민과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법규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준용량(설치용량) 대비 | 설치시 청구요금 | 절감 요금 |
|--------------------|-----------|------------|
| 8만원 (약 415kWh)일 때 | 약 1,800원 | 약 78,200원 |
| 10만원 (약 460kWh)일 때 | 약 5,600원 | 약 94,400원 |
| 12만원 (약 500kWh)일 때 | 약 8,900원 | 약 11,100원 |
| 15만원 (약 540kWh)일 때 | 약 16,500원 | 약 133,500원 |
| 20만원 (약 610kWh)일 때 | 약 30,600원 | 약 169,400원 |
| 25만원 (약 680kWh)일 때 | 약 48,000원 | 약 202,000원 |
| 30만원 (약 740kWh)일 때 | 약 72,000원 | 약 228,000원 |

※가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062-512-1180/ H,P 011-659-7001